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음 9월 5일) 제16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프랜차이즈 골목상권 진출에 도내 자영업자들은...

## “우린 뭐 먹고 살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자본력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앞세운 방송의 가세로 지역 골목 식당가가 무차별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40, 50대 조기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먹고 살려면 자기가 직접 업소를 차리는 소위, 자영업에 뛰어든 수 밖에

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주로 진출해 골목 상권 상인들과 생존권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본력을 앞세워 식당 수가가 많은 곳에 주로 입점하기 때문에 주변 식당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중화산동과 서부 신시가지, 전북대 인근 등 주요상권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빵집, 커피전문점, 식당들이 최근 몇 년 새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골목 식당들의 피해는 가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자영업자는 “소비자 구매 패턴이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객에 공을 들여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은 영세하지만 그런대로 안정된 일터라고 생각하고 가게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 인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대신에 프랜차이즈가 고용하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골목상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도내 자영업 창업자수는 31만 3,684개, 폐업자수는 26만 6,386개에 달했고 이기간 도내 자영업 생존률은 15.1%로 나타났다. /신광영 기자

###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영향력

자본력·방송 가세로 지역 골목 식당가 '잠식' 식당 업주들 “대형마트 입점 규제처럼 해라”

### 일자리 부족... 자영업자 증가 속 생존 가능성은?

자영업자 대부분 도·소매·요식업에 몰려 소자본으로 출발해 영세성 피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 영역과 겹쳐... 피해는 예측불가

이에 식당 업주들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것처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계청 올해 상반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5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상반기 25만1,000명 대비 5,000명이 증가했다.

중상상위별로 살펴보면 중업원을 두는 자영업자의 경우 5만명, 중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2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영업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소매업과 요식·숙박업에 몰려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더하면 7~80% 수준이다.

별 경험이나 기술 없이도 뛰어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 경쟁도 치열하고 생계를 위해 소자본으로 업소 문을 열기 때문에 규모의 영세성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감치치게, 국수, 우동, 김밥 등 주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중자오염·환경오염 초래...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 멈춰라”

시민단체, 농진청에 촉구... “GMO 연구개발 불법 횡행”

GMO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농촌진흥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자오염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유전자조작(GM)작물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전자조작생명체(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GMO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은 문산도와 같은 다국적농화회사로, 정부 주도로 GMO를 연구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진청의 경우 GMO에 대한 안전성을 맹신하고 GMO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주곡인 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불안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농진청은 GMO 연구개발에서 격리포장 등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

고 승인받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재배가 이뤄지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농진청을 비롯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GMO 연구개발과 생산에 제동을 걸고, GMO로부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지닌 국민의 동의 없는 GMO연구개발의 중단조치와 GMO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교통안전 사고개선 ‘유명무실’

전현희 의원 “임실군, 이행율 5.5%로 최저”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교통안전 사고개선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까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

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는 임실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14개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이 지적됐으나, 고작 5건만 개선해 이행율이 5.5%에 그쳐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부산 중구(14.0%)와 제주 서귀포(18.6%), 강원 원주(26.6%) 등도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했다.

장수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1년 특별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이행률은 2013년 당시 26.2%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국 평균(22.4%)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 바 있던 했지만 전국 하위권은 면치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문 탓이다.

전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도-도교육청, 누리과정 평행선... 협의 무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자유학기제·무상급식 단가 인상 등 15건의 협의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15건의 협의안 중 도는 10건을 교육청은 5건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유학기제와 학교주변 안전점검,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등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2건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합의 처리됐다.

미합의 처리된 2건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청했지만, 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협의를 안된 일부 사항들이 있어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일부 협의안의 경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며 당초 이날부터 연가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했다. /뉴스

제13회 익산 **천민송이** **꽃화축제**

10.28(금)~11.6(일)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

백제왕도 익산으로 오세요~